

## 제 2 장

---

국제정세 및  
지역정세



## 제1절 1993년 국제정세 일반

1993년은 미·소 양극체제와 냉전질서가 붕괴되면서 시작된 국제질서 개편 움직임이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낸 한 해였다. 「냉전이후 시대」에 있어서는 이념적 요인을 대신하여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지역주의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민족·문화·종교적 요인들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냉전종식후 유엔의 평화 안보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 등 주요국가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어 유엔이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세계는 전환기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해 동안 개혁과 변화의 움직임이 크게 두드러졌으며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은 큰 진전을 이루었다.

지속적인 경기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방 주요국가(G-7)들은 경제회복 등 국내문제에 치중하여 저비용·저위험의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경기침체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 정치 지도자의 교체를 가져온 큰 요인이 되었는바 1994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독일, 이태리 등 서방 주요국가들의 집권당은 낮은 지지율로 고심하고 있다.

1993년 1월, 12년만에 집권한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는 “미국의 재건”을 기치로 연방예산 적자와 국방비 축소, 의료제도와 선거자금법의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부와 의회간 대립(gridlock)의 해소를 꾀하

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국내문제의 해결이 정책의 최우선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국제경쟁력 회복과 경제 재건을 위한 외교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구하고 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NAFTA) 이행법안을 11월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UR협상을 타결시킴으로써 지도력을 과시하였다. 이에따라 미국 경제는 1993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정적자의 누증과 민간소비 수요의 부진 등으로 그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8월들어 자민당의 38년집권이 무너지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한 호소카와 연립정부는 정치개혁 단행을 내각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였다. 대외정책에 있어 연립정부는 자민당의 정책을 계승하여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환경하에서 자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추구함으로써 신국제질서 구축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구조적 불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1993년중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된 주변환경 조성을 대외정책의 주요목표로 하고 모든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였다. 중국은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여 다자간 지역협력 문제에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바 있다. 1993년에는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다소 주춤했던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하여, 대외개방의 대상산업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3%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물가불안과 무역수지 적자현상이 심화되어 하반기 부터 안정화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신헌법 제정방향과 엘친 행정부의 급진 개혁정책 추진을 둘리싸고 대통령과 의회 보수파간의 대립으로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9월 엘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초헌법적 의회 해산조치를 통하여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제 신헌법을 채택함

으로써 소연방 해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온 소비에트 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 12월 총선결과 개혁파 정당이 예상외로 부진한 반면,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자유 민주당과 공산당 등이 부상함으로써 여타 CIS 국가와 중·동구국가는 '대리시아'의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

EC(구주공동체)는, 1993년 1월 1일 구주 단일시장이 공식 출범, EC회원국간 노동·상품자본·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한편 EC 12개국과 EFTA 5개국간에 체결된 구주경제지역 설립 협정이 12월 13일 비준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세계교역의 4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구주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이 2년에 걸친 비준과정 끝에 1993년 11월 1일 발효하여 구주연합(European Union)이 공식 출범함으로써 1993년은 구주통합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한해로 기록되었다. 구주연합 각국은 재정적자의 누적, 수요부진, 환율체제의 불안, 미·일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의 여파 등으로 18년만에 마이너스 성장과 전후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1993년은 민주화가 크게 진전된 한해로 기록된다. 한국에서는 30여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하였으며, 태국, 싱가포르,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는 민주화의 도미노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종래의 권위주의 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화의 진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민주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시장경제개혁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사회주의권 뿐만 아니라 인도 등 서남아시아와 에티오피아와 가나 등 아프리카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구 동구권에서는 체코와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93년에는 7년여를 끌어 온 우루과이 라운드가 12월 15일 마침내 타결

되어 보호주의의 확산이 억제되고 자유무역으로의 복귀추세가 강화되는 등 국제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면서도, 세계경제질서는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다자주의와 쌍무주의 등 상반되는 현상이 혼재되어 있다.

UR의 타결로 제반 보호조치의 장벽이 낮아짐으로써 경쟁의 심화가 초래되는 한편, 지역주의의 세계적 확대추세에 따라 역내국가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경쟁이 격화되었다.

1993년에는 고질적인 지역분쟁이 종식되기도 하였지만 일부지역에서는 분쟁해결의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는 유엔임시행정기구(UNTAC)의 감독하에 1993년 5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9월, 신정부가 출범, 15년간의 내전이 종식되었다. 9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간의 자치협정은 반세기를 끌어온 중동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백인통치와 인종 분리정책이 종식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또 12월에 영국과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특히 보스니아와 구소련 일부지역에서 분쟁이 격화되었다.

한국, 대만, 중국 그리고 태국·말레이지아를 중심으로 하는 ASEAN 등 동아시아 지역은 1993년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아시아지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정치·사회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돼 아시아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은 현저하게 높아졌다. 11월에 시애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첫번째 정상회의가 열림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이 크게 진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3년 7월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은 아·태지역 18개국 외무장관간에 정치, 안보문제 협의를 위한 ASEAN지역포럼(ARF)을 발족시켰는바 이는 앞으로 이 지역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장래 미국의 발전이 아·태지역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도 아시아를 중시한 「재아시아화」(Re-Asianization)의 논의가 일고 있으며 독

일 등 유럽국가들도 앞다투어 아시아와의 경제관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아시아정책을 내놓고 있다.

1993년은 냉전이후의 국제관계에 있어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실감케한 한 해였다.

## 제 2 절 동북아 정세

범세계적 냉전 종식 이후, 미·러·중 3개의 핵국가와 경제 초강대국인 일본등 4강의 이해가 침예하게 교차하는 동북아 정세는 유럽지역에서 겪었던 혁명적 변화에 비해 그 속도와 범위가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데并不意味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의 경우 과거 동·서 진영간의 양극화로 말미암아 어느 한 쪽의 변화가 다른 쪽의 신속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었으나, 동북아는 단순한 동·서 냉전 차원이상의 복잡한 역학관계로 인하여 그 변화 속도가 유럽과는 달리 느리고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에 이어 구소련의 역할을 계승한 러시아도 국내 체제 전환과 안정에 몰두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은 미·러간 전략적 경쟁이 사실상 종식된 상황에서 질서 재편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미·소 신데并不意味, 중·소 화해, 한·소 수교 및 한·중 수교 등 일련의 급속한 양자관계 변화가 동북아 냉전구조의 종식에 기여하여 왔다. 현단계에서 미·러 협조, 중·러 화해와 대조적으로 일·러 및 미·중 관계가 소원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로 양자관계의 재정립을 통한 4강 관계개선 모색은 동북아 전략 환경을 완만하지만 지역 데并不意味 추세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정치·경제·사회 등 국내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어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일도 러시아 극동군

이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극좌 또는 극우 파시즘 국가로 전락하지 않는 한,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적 위험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장기적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태 경제권에 적극 진출하고, 한국, 일본 등 이 지역 국가들의 시베리아 개발참여를 유도하는 등 경제 중심의 대아·태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축 및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도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의 잠재적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지대에서의 계속적인 군축 및 교역 증대(1992년 30억 달러) 등 협력을 확대해 왔다. 그리고 국내의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평화우호조약 체결 추진 및 경제협력 증진등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선거(1993. 12. 12)를 계기로 한 지리노프스키등 극우세력의 등장은 엘친 정부의 대일본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四項堅持原則」의 고수 등 사회주의체제 수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개방·개혁을 통한 현대화정책을 지속하기 위하여 평화로운 주변환경이 계속 필요하므로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의 안정유지를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 3성 및 연안지역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하여 남북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APEC 등 아·태지역 경제협력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대미무역 흑자(1993년 200억 달러 예상)로 인한 무역마찰의 심화와 인권문제, 그리고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판매와 같은 현안문제를 놓고 미국과 소원한 관계에 있다. 특히 미하원의 인권문제와 연계한 2000년 북경올림픽 개최 반대결의(1993. 7. 27) 및 이란행 중국 화물선 「은하호」에 대한 미 합정의 추적사건(1993. 8.) 등 일련의 사태는 양국간 긴장관계를 지속시켰다. 그러나 미·중 양국은 군사적으로 상호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인식하에, 한반도 등 동북아 및 아·태지역 안정을 위한 긴밀한 관계

유지의 필요성은 물론, 상호혜택이 되는 경제협력의 잠재력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게 인권 문제의 진전을 조건부로 최혜국대우(MFN)를 연장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애틀 APEC 정상 회의(1993.11.)에 강택민 중국 주석을 초청하는등 양국간 긴장을 완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옐친 대통령의 중국 방문(1992.12.)을 계기로 중·러 관계는 더욱 확대추세에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양국은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 문화 등 실질 관계증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은 물론, 양국 국경지대의 군사력을 계속 축소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동북아지역 긴장완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의 해·공군력 강화와 러시아의 경화 획득수단으로서의 대중국 침단무기 판매는 미·일 등 관련국가들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은 PKO 참여 등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할증대를 지지하는 한편, 일본의 군사대국화 노선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중·일관계는 아끼히또 일왕의 중국 방문(1992. 10.)을 계기로 무역, 투자, 동북아지역 협력 등 실질협력을 바탕으로 확대·발전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일관계의 발전은 미·일 안보문제가 기본적으로 현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본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만일 일본이 미·일 안보 틀을 벗어나 독자적 안보정책을 선택할 경우, 중·일간 잠재적 세력경쟁은 보다 노골적으로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금세기 말까지 현재의 미·일 안보관계가 지속될 것이라 는 점에서 중·일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양상을 띠어갈 것이다.

일본은 종래 미국과의 지역적 맹방관계는 물론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세계적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앞으로도 미·일 안보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지역 정세에 비추어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

- 안보적 역할 증대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의 독자적 외교 행동반경을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경제개발을 위하여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본의 이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역할은 증대될 것이다.

경제우선주의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클린턴 미행정부의 등장 후 미.일 양국간에는 심각한 무역불균형 등 경제 마찰로 인한 갈등 관계(troubled partnership)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계 경제·금융·기술의 주도국으로서 밀접한 상호협력관계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의 현대화 등 경제발전에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이익추구를 겨냥함과 동시에, 중국의 국내정치 안정을 통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국의 해·공군력 강화에 대해서는 이를 견제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시장경제체제에로의 전환 및 아·태지역에 대한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며, 일본도 북방영토문제 해결과 관련, 종래의 정경일치정책을 보다 신축성있게 펴나갈 것임에 비추어 중장기 차원에서 양국은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 일본의 대러시아 경협이 본격화되는 등 일·러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1997년까지 국방예산 1,100억 달러 삭감, 상당수의 병력감축을 목표로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에 따라 2,000년까지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3단계 부분감축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클라크 공군기지, 수빅 해군기지 등 필리핀내 미군사기지의 폐쇄로 필리핀 주둔 미군이 철수하였고, 북한의 핵 개발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적어도 단기적 차원에서 EASI 계획에 따라 이미 확정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부분감축정책 이상의 급격한 감축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냉전시대의 대소 봉쇄정책과 이에 따른 전진배치 방위전략의 대폭

적인 수정과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기본적으로 태평양지역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아·태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중·일 등 지역 세력간 패권경쟁 가능성 등 지역 불안정 및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지역안정임무(regional stability mission)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일 안보체제를 기축으로 하여 현저하게 축소된 규모로나마 동북아지역의 전진기지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미·러 관계에 있어서의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소멸된 상황에서 미국은 앞으로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 및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 증대 추세와 관련, 과거의 군사전략관계 위주에서 탈피하여 경제 위주의 실질관계 및 정치적 협력증대에 역점을 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등 지역패권추구를 견제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하여 제3세계에 대한 원조의 대폭 확대를 권장하겠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경계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일본의 과도한 정치·경제·군사부문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일미군의 계속 주둔 등 미·일 안보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 4강은 「느슨한 4강체제」를 형성, 상호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양자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으므로, 4강간의 전쟁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4강간의 경쟁과 협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특정 이슈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보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소연방의 역할을 계승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동북아에서의 미·소(러)간 경쟁이 종식됨으로써 잠재적이지만 새로운 안보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냉전 종식후 미국의 대소봉쇄정책과 전진배치 방위전략의 재조정 및 수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미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면 「힘의 공백」 상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인식이 동아시아 국가들간에 증대 되

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 강대세력인 중국과 일본이 서로 지역패권을 다투 가능성이 있으며, 중·일을 비롯한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증강 추세는 역내에 새로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를 개별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에 의존하는 현상은 이 지역의 불안정 및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역내 불안정 및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다자간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움직임이 다각도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다자간 안보협력 레짐의 구축은 관련 지역국가간 「대화의 습관」을 통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증진시킴으로써 역내 국가간 공동안보 의식을 증대시켜 동북아 질서재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카나다, 호주 등은 북태평양 및 아·태 지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해군력 감축 등 전반적인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도 ASEAN-PMC를 아·태 지역 안보 문제 토의를 위한 포럼으로 활용하자고 제의하는 등 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 태도로 선회하였다.

종래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하여 지역세력중 유보·회의적 태도를 보여 온 미국도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와 기존 양자간 안보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 나타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 및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간 지역안보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을 표방하였다.

미국은 현재 ASEAN이 주도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 포럼으로 ARF를 지지하고 있고, 한국이 제의한 소지역 차원에서의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레짐 구상에 대하여도 지지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아·태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이 성공적으로 발전될 경우 이를 안보 협력 체로 확대 발전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의 신 태평양공동체 구상은 APEC을 경제·안보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을 겨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동북아 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완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역국가들간의 경제관계 변화를 들수 있다. 최근 수년간 팔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경제의 아태지역 경제권 및 세계경제에의 편입,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 구상 등 지역국가들 간에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목표로 정치·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추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체제전환과정에 있는 러시아로서는 자원이 풍부한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이 긴요한 과제이며, 개방·개혁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은 중화학공업의 중심인 동북3성의 경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도 서방으로부터 기술 및 자본을 도입, 구조적 경제난관의 타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두만강 유역의 국제적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이 접경한 두만강 유역, 동북3성, 극동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3각의 동북아 개발권이 형성될 가능성 있다.

결국 동북아정세는 종래의 군사·전략적 「고위정치」보다는 동북아개발권의 경우처럼 각국의 경제 발전을 겨냥한 지역경제 협력의 가시화 등 「하위정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크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동북아 4강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양자관계의 재정립 과정을 통하여 완만하지만 지역데땅트 추세로 나갈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다자간 안보협력레짐을 수용함으로써 보다 안정되고 균형된 세력관계의 틀 속에서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경쟁적 공존관계(competitive coexistence)의 양상을 띠어갈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구조적 안보연계성에 비추어 동북아의 이러한 역질서 개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가 해소되어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이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동북아 전략환경의 안보 핵심고리(security lynchpin)를 이루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미·러 협조, 중·러 화해 등 범세계적 탈냉전 추세에 힘입어 이미 한·러 및 한·중 수교,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등이 이루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성공적인 경제개혁 추진을 위해 평화로운 주변환경 유지를 필요로 하며, 한국을 포함한 서방측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 양국은 또한 한국과 수교한 후 북한의 개방·개혁 및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에 대한 위협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한 바 있고, 남북한 경제교류도 적극 추진시키려는 의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당면한 경제위기 타개와 대일 수교, 대미 관계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등 주변세력의 압력과 핵확산방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or NPT)체제의 강화추세에 비추어 북한은 결국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됨은 물론이고 1995년도 NPT 체제의 연장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이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외교현안으로 다루어 왔다. 즉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에 대하여 과거의 봉쇄(containment)에서 포용(engagement) 정책으로 전환. 소위 「채찍과 당근」(stick & carrot) 정책을 병용해 가면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진력해 왔다. 그러나 1993년중 북한 핵문제를 해결코자 했던 한국과 미국 등의 노력은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이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남

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동유럽의 본질적 변혁 및 구소련의 붕괴 등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여 유엔 가입 및 미·일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 대외정책 면에서는 현실주의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지도체제의 장기적 집권 및 북한체제의 폐쇄성, 경직성 등 구조적 취약 요인으로 북한은 개혁·개방이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방정책을 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지도체제는 북한의 경제파탄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방의 필요성과 다른 한편, 김일성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체제수호 필요성간의 심각한 괴리현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듯 하다.

요컨대 북한은 심화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을 모면키 위해 대외개방과 핵사찰 수용이 불가피하나 체제경직성으로 인해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의 설득에 따라 핵개발 의혹이 제거되고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관련, 미·중 등 직접적인 관련국은 물론 일·러 등 유관국들을 포함한 4강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견이 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및 체제의 경직성, 폐쇄성 등 구조적 취약 요인으로 인하여 북한체제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점은 4강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4강간의 기본 인식의 차이는 한국 주도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에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 주요 변수인 남북한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 주변세력간 갈등요인의 대두(군비증강, 무기판매, 인권 문제 및 무역적 자를 둘러싼 미·중간 긴장, 북방영토를 둘러싼 일·러간 갈등, 일·중간 지역

패권경쟁 가능성) 등 4강간의 불협화음은 한반도문제 해결에 역작용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 제 3 절 각지역 정세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 1. 아주 지역

#### 가. 일본

##### 1) 개관

1993년도는 탈냉전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가 대내외적으로 본격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국제공헌에 관한 국내의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의 적극 참여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등에 대단한 관심과 열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92년 캄보디아에의 자위대 파견에 이어 1993년 5월에는 모잠비크에 53명의 자위대를 파견하였으며, 1993년 7월에는 「UN안보리 개편건의서」를 통해 안보리의 확대 개편 필요성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을 공식 천명하였다.

한편, 선거제도개혁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을 거듭하던 일본 정국은 1993년 6월 야당의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됨으로써, 국회가 해산되고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결과, 신생당, 사회당, 일본 신당등 8개정파로 구성된 호소카와 연립 내각이 발족하게 됨으로써 1955년 창당이래 집권을 계속해온 자민당은 변

화와 개혁을 표방한 신 정치세력들에 의해 야당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38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호소카와 총리는 1993년 8월 취임 국정연설에서 정치개혁 단행을 내각의 최초 그리고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정치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 2) 국내 정세

교와사건, 사가와큐宾 사건등 각종 정치자금 스캔들로 일본 국민의 정치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문제로 혼미를 거듭해온 일본정국은 1993년 6월 자민당이 “단순 소선거구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중의원에서 강행 표결처리키로 결정하자 사회·공명·민사당등 3대 야당은 이는 사실상의 선거제도 개혁단님이며, 미야자와 총리가 1993년 국회에서 선거 제도 개혁을 실현 한다는 자신의 공약을 위반한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3당 공동으로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였다. 한편, 자민당내 하타파등 개혁파의원 다수가 야당의 내각불신임안에 동조함으로써 1993년 6월 18일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고 미야자와 수상은 국회를 해산하였다. 국회 해산에 따라 실시된 7월총선 결과 자민당은 과반수 의석인 256석을 대폭 하회하는 223석의 의석 획득에 그쳤으며, 사회당은 당초 135석에서 70석으로 의석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퇴조를 보인 반면, 변화와 개혁을 표방한 신생당, 일본 신당등 신생정당들은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총선이후 자민당 주도의 연립정부 구성노력이 실패함으로써, 자민당 1당집권의 “55년 체제”가 붕괴되고 비공산·비자민 8개정파로 구성된 호소카와 연립 정부가 1993년 8월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호소카와 연립정부는 연립정부의 결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각당의 당수 전원을 입각시켰으며 각료직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당의 도이 전당수가 중원의장으로 선출되고, 신당선구의 다케무라 당수가 관방장관으로 기용되었다. 연립 정부는 정치개혁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

로 자민당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이며 정치개혁 및 행정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 완화, 지방분권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호소카와 연립정부는 발족이래 국내 정치개혁 단행을 내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등 정치개혁관련 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들은 1993년 11월 중의원을 통과하고, 참의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당 입장대립 및 연립여당 내 사회당의 일부 정치개혁 반대파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1993년 8월 호소카와 연립내각 발족과 정치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정국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창당이후 최초로 야당으로 전락하게된 자민당은 미야자와 총리가 1993년 7월 총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9월 임시전당 대회를 개최하고 코오노 요헤이 의원을 새 총재로 선출하였다. 코오노 총재는 과별 해소등 당개혁 방침을 천명하고, 연립정권의 결속 와해를 유도하는 재집권 전략을 추진해 나가면서 당내 과별해소, 정년제 도입 및 정치윤리심사회 설치등을 통한 당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1993년 7월 총선에서 의석수가 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창당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회당은 1993년 9월 개최된 당대회에서 무라야마 위원장, 쿠보 서기장의 신집행부를 구성하고, 당의 결속과 연립내각의 정치개혁 성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 운영 및 정치개혁 문제를 둘러싼 당내 좌우세력의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금후 정계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당의 분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3) 대외 관계

탈냉전시대의 도래로 국제사회가 다극화되고 경제요인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자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외교방위정책은 1993년 8월 출범한 신정부

에 의해 계승되고 있으며, 일본은 신국제질서 구축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지원, ASEAN과의 협력관계발전, 캄보디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인도지나 제국과의 협력등을 아시아외교의 구체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안보면에서 미·일 동맹관계와 경제면에서 미국시장의 중요성으로 인해 대미관계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호소카와 총리는 1993년 9월 취임후 첫 해외방문국으로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미·일관계를 신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일본 외교의 기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커다란 변화없이 금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나 미·일 양국간에는 미국의 대일 무역역조 문제와 같이 잠재적 갈등·마찰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1993년 9월에 시작된 미·일 포괄 경제협의 등 양국간 새로운 경제관계의 정립노력이 금후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앞으로의 미·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러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고있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 경협이나 투자를 북방 4개도서 영유권 문제의 처리와 연계 시키던 입장을 완화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던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이 1993년 10월 실현되어 양국은 북방영토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양국간 최대현안인 북방영토 문제 및 경협문제를 다루는 정기협의회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러시아 시장경제개혁 지원을 골자로 한 「경제선언」과 양국간 관계 개선을 약속하는 「동경선언」이 발표되었다.

일본은 중국의 안정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도 근대화 정책 추진에 있

어서 일본 자본과 기술협력의 중요성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1992년 4월 강택민 총서기 방일에 이어 1992년 10월 일황의 방중, 1993년 5월 전기침 외교부장의 방일등 양국간 수뇌교환 방문을 통해 양국은 우호협력관계의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나. 중국

### 1) 국내 정세

강택민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지도 체제는 1992년도에 이어 1993년도에도 지도자 등소평의 강력한 지지하에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국에서는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개혁·개방정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1993년 3월에 개최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92년 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4기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이론을 강조한 강택민 총서기의 정치 보고를 승인함으로써, 향후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강택민 총서기는 국가주석직을 겸임하게 됨으로써 당, 정, 군에서 최고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전기침 외교부장과 이남청 대외경제무역부장의 부총리 승진으로 6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물론, 개혁·개방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필요성, 농촌문제,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점들도 동시에 대두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여부가 향후 개혁·개방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미 본 궤도에 진입한 개혁·개방정책을 후퇴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2) 경제 정세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개혁·개방정책은 그 속도와 폭에 있어 다소 조정 시기를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듯이 보였으나, 1992년 등소평의 소위 “남순강화”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93년에는 대외개방의 대상 산업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전방위 개방”을 추진하여 1992년도의 12%에 이은 13%의 고도경제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1993년 11월에 개최된 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에서 는 전국의 통일적인 시장경제 발전 및 거시경제 조정체제 확립, 국유기업의 현대식 기업제도 수립, 대내경제 체제 개혁심화 및 대외개방확대 등을 포함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에 관한 결정”이 통과됨으로서 중국 지도부의 개혁·개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 의지를 과시하였다.

현재 중국은 1994년도 GATT가입을 목표로 대외경제무역 분야의 법률과 제도를 국제 규범에 맞도록 정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 금융제도 및 외환제도 개혁 등 경제제도 개혁문제가 당 14기 3중전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 되었다.

이와관련, 중국 중앙은행은 종전까지 시행해오던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외환 관리국이 매일 고시하던 공정환율을 철폐함으로써 외환 시장의 수요·공급에 입각한 단일 변동 환율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물가불안과 무역수지 적자현상이 심화 되어, 무역수지는 1992년도의 44억불 흑자가 1993년도에는 122억불의 적자로 반전 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은 1992년의 5~6%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3%를 기록하였다. 이에 정부는 주용기부총리를 중심으로 거시경제 조절을 통한 안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10%이상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영기업의 적자 및 경영의 비효율성, 재정적자의 누증, 수송수단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등도 해

결해야 할 과제다.

### 3) 대외 관계

1993년 3월 이봉 총리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된 주변환경 조성 이 중국 대외정책의 주요목표라고 언급하였는 바. 중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 시키는 소위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 후의 외교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ASEAN 국가들, 한국 및 일본등을 포함한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1993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PMC에 게스트 자격으로 참가하였으며 1993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APEC정상회 의에도 참석하는 등 양자관계뿐 아니라 다자간 지역 협력 문제에도 점차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는 클린턴 대통령 취임 이후 인권, 민주주의 및 무역 불균형 문제 등으로 초반부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2000년 북경 올림픽 유치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대입장 표명 및 1993년 10월 중국의 지하핵실험 강행등으로 양국관계는 긴장상태에 있었으나, 1993년 11월 미·중 정상회담 개최등을 계기로 관계개선을 모색중이다. 중국은 당면최대 과제인 경제개발을 위하여 일본과의 협조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1993년 5월 전기침 부총리겸 외교부장의 방일, 11월 미국 시애틀 개최 APEC 정상회의시 일·중 정상회담 개최등을 통해 양국관계 증진방안을 협의하였다.

#### 다. 동남아 지역

##### 1) 지역 정세

동구 공산권의 와해, 소련연방의 해체등 국제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동남아 지역 정세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데, 무엇보다 1970년대 중반의

베트남 통일,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등으로 현실화된 인도지나 사회주의권과 비공산 아세안 지역과의 양극화된 대립구조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특히 1991년 10월 캄보디아 평화협정체결 이후 캄보디아는 유엔임시행정기구(UNTAC)의 감독하에 1993년 5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9월 신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15년 간에 걸친 내전을 종식시켰으며, 베트남도 1986년이래 Doi Moi (쇄신)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세안은 냉전의 종식과 인도지나 정세의 변화, 유럽통합 및 NAFTA 설립등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등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에 발맞추어 아세안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 왔다. 1992년 1월 개최된 제4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지역공동체로서의 아세안의 결속을 재확인하고, 향후 인도지나 국가의 아세안 참여를 목표로 한 이들 국가와의 협력강화, 역내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한 역외국가와의 정치·안보대화 개시, 그리고 아세안 자유무역 지대(AFTA) 설립등 지역경제통합 추진에 합의하였다.

1980년대 중반이후 1993년도에 이르기까지 아세안 제국은 연평균 6%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과 함께 향후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인도지나 국가들의 개방정책도 동남아지역의 경제전망을 밝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맞고 있는 미국에게 동남아제국의 고도 경제 성장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지역의 경제활력을 미국 경기회복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동남아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아시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정책도 계속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안보면에 있어서 아세안은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공산주의체제의 위협은 해소되었지만 남사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다툼 등으로 영토분쟁이 재연되고 있으며, 신장된 경제력에 따라 역내 국가들간 새로운 군비경쟁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아세안제국은 새로운 안보환경과 새로운 잇슈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1993년 아세안확대 외무장관회담은 1994년부터 아·태지역 18개국 외무장관간에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토의를 주목적으로 한 아세안지역 포럼(ARF)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 2) 각국 정세

동남아 지역내 각국은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안정기반속에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81년 마하틸 수상 집권이후 총선에서 집권여당 연합의 계속적인 압승, 경제개발 정책의 성공적 추진, Bumi Putra 정책(말레이계 우대정책)을 통한 인종간 갈등극복등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다민족국가인 말레이지아는 인종간 조화문제, 말레이 계내 극단 회교 세력문제, 동부 Sabah 주의 연방정부로부터 분리운동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마하틸 수상의 강력한 지도력하에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군의 정치적 간섭속에서 혼란을 거듭했던 정국이 1992년 9월 총선으로 민주연립내각이 출범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경제면에서도 산업경쟁력 강화 및 대외무역 진흥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시현되고 있다.

1965년 독립이래 리콴유수상 지도하에 정치·사회적 안정 및 경제발전을 지속 해온 싱가포르에서는 1990년 11월 리콴유수상의 정치일선 후퇴 및 고 촉통 부수상의 수상직 승계, 대통령 직선제 도입등으로 정치권력의 1인 집중체제에서 권력분산 형태로의 점진적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3년

8월에는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옹ቴ청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제 면에서 싱가포르는 동·서 교역의 지리적 중심지로서 아시아에서는 일본, 브루나이에 이어 제3위의 고소득 국가로 부상하였는바, 1993년도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15,000불에 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67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집권 아래 군의 이중기능(국방 및 사회참여) 및 Golkar(직능그룹) 조직을 중심으로 지난 26년간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왔다. 1993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수하르토 대통령은 6선 연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운동(NAM)의 의장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1991년 11월 동티모 지역 분리 독립 운동사태 이후 동티모 문제는 계속 국제적 관심을 끄는 주요 사안으로 남아 있다.

필리핀은 1992년 6월 신임 라모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민화합과 경제 재건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라모스 대통령은 공산당을 합법화 함으로써 필리핀 국민간 반목과 투쟁을 완화해 나가고 있으며, 해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최후진 국가로 전락한 필리핀을 21세기 전에 신흥 공업국 대열에 올려 놓기 위해 “필리핀 2천년”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 하싸날 볼키아 국왕의 절대 권력 하에 정치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유 및 LNG 수출과 약 250억불 규모 보유 외환의 해외 운영 이자 수입금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공 복지 수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베트남은 1992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공산주의 이념 구현 조항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칙을 강조하였고, 당과 국가의 분리, 3권 분립, 정부제도의 개편, 개인의 권리 확대를 확립 시킴으로써 1986년 이래 시행된 Doi Moi(쇄신) 정책을 정치적·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헌법 개정은 경제개혁과 개발정책을 최우선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1992년 12월 한국과의 수교, 최근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 등은 이러한 베트남의 급격한 정책 변화를 반영한다.

1988년 대규모 반정부 소요사태후 군사정권이 5년째 통치중인 미얀마는 1993년 1월 신헌법 요강 마련을 위해 국민회의를 개최하고 1993년 9월에는 군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기본원칙 초안을 결정한 바 있다. 최근 미얀마는 경제성장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서방국가들은 아웅산 수지여사의 가택연금문제 등 미얀마의 인권상황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1993년 5월 국민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집된 제헌의회는 시하누크를 국왕으로 옹립하는 입헌군주제 형태의 신헌법을 제정 하였고, 그 결과 9월에는 라나리드와 훈센을 공동수상으로 하는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이제 약 15년에 걸친 캄보디아 사태는 완전한 해결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아직까지 무력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크메르루즈파의 치리 문제가 정국 불안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라오스는 1986년 제4차 라오스 인민혁명당 전당대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래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대서방 관계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1992년 7월에는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에 가입하였다.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동남아지역 국가중 아세안 6개국과 모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상주대사관을 설치 운영하는등 전통적으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 시켜 오고 있다. 특히 우리는 1989년 11월 아세안과 부문별 대화관계를 수립하고 1991년 7월에는 이를 완전 대화관계로 격상시켰으며, 1991년 이

후 매년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에 참석하여 세계의 주요국가들과 함께 주요 국제 정치·경제문제에 관해 토의하고 있다.

1992년 12월 22일에는 이상옥 외무장관의 베트남 공식방문을 통해 양국 간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한·베트남 수교는 그간 우리의 북방외교가 인도지나 사회주의 국가로까지 확대됨으로써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정치적 의미 외에도 한·베트남 양국간 과거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지향하자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 한·베트남 수교로 양국간의 실질협력관계와 인적교류는 크게 신장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1993년 11월에는 호치민시에 우리의 총영사관이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우리와 동남아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규모는 매년 확대추세에 있다. 1993년도 대아세안 교역규모는 약 165억불로 아세안은 미국, 일본 및 EC에 이어 우리 나라의 제4위 교역상대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수출액면에서만 보면 아세안은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제3위 수출대상지역이며, 우리에게 매년 약 20억불의 무역흑자를 가져다 주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도 동남아지역은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지리적 균접성, 문화적 유사성등으로 이지역에 대한 우리의 투자규모도 매년 증가하여 1993년 6월말 현재 대아세안 투자는 12억불 (해외 총투자중 24%) 규모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해외건설분야에 있어서 동남아지역은 우리에게 제1위의 건설수주 지역 (1993년도의 경우 전세계 건설 수주의 약 70%)으로서 그 중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아세안 간에는 통상, 투자 및 관광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개발협력 및 인적자원개발 등 여러분야에서 협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 문화분야로 협력이 확대됨으로써 양국민간의 상호 이해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베트남과의 관계증진, 여타 인도지나 국가의 개방화 등으로 우리  
의 대동남아 경제, 통상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갈것으로 전망된다.

#### 라. 서남아지역

##### 1) 정세개요

1990년대 이후 서남아지역 정세는 다음 세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동구변화, 소련의 붕괴 등에 영향을 받은 세계적인 민주화 추세에  
따라 민주적 총선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둘째로 강대국간의 협  
조분위기에 따른 아프간 사태의 해결가능성 및 인도, 파키스탄의 화해노력  
등으로 서남아 지역에서의 긴장완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셋째로는 사회  
주의 경제를 탈피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 경제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점  
이다.

인도는 1991년 6월 총선결과 라오 수상이 집권, 신경제정책을 표방하여  
경제개발을 적극 추진중이며, 또한 정치적으로도 과거 단명정부에 비해 현  
정부는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1993년 2월 샤리프 수상의 대통령권한 축소목적 헌법개정 시  
사후 대통령과 수상의 불화속에서 1993년 4월 Ishaq Khan 대통령은  
Nawaz Sharif 수상내각 및 하원해산을 단행, Sajjad 상원의장이 대통령,  
Moin Quresh(전세계은행 부총재)는 과도내각 수상에 취임 1993년 10월  
6일 총선실시를 주관하였다. 총선결과 Benazir Bhutto가 이끄는 파키스탄  
민주당(PPP)이 86석을 획득, 73석에 그친 Nawaz의 파키스탄 회교연맹  
(PML-N)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방글라데시는 엘사드 대통령이 1990년 12월 국민의 민주화 시위에 굴복,  
사임하고 1991년 2월 자유총선을 실시하여, Khaleda Zia가 이끄는 방글  
라데시 국민당(BNP)이 다수 의석을 획득하여 문민정부를 수립하였다.

스리랑카에서는 1993년 5월 프레마다사 대통령이 노동절 행사중 암살되었으나, Wijetunga수상의 대통령 취임후 1993년 5월 주의회 선거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위제통가 대통령 및 집권당(UNP)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네팔에서는 1991년 5월, 30년만에 자유총선이 실시되어 코이랄라 내각이 발족하였으나 경제난의 지속, 야당의 비협조 등으로 대규모 파업발생 등 정국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부탄은 네팔의 민주화운동에 고무된 네팔족(25%) 등 부탄내 소수민족들이 종족차별 정책 철폐를 요구하는 등 불안요인이 증가하자 현 절대왕권 정부는 체제안정 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미·소간의 대립이 완화되자, 서남아지역의 국제정치 질서도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미국은 핵개발을 이유로 종전 우방국이었던 파키스탄에 대해 원조 전면중단 등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인도는 소련의 국제적 지도력이 상실되고 자국의 경제개발 추진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캐시미르 사태를 둘러싼 긴장요인이 있으나 1991년 4월 국방차관 회담과 1991년 10월 외무차관 회담을 개최, 상호 영공불가침 및 군사 훈련 사전 통보 등에 합의하는 등 관계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양국 공히 군사비 절감을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어 긴장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나 인·파 양국의 종교우월주의 경향증대에 따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인도의 주변국들은 아직도 인도가 강국으로서 서남아 지역내에서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나, 세계 최후진지역의 하나인 동 지역이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등 지역협력 노력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서남아지역 7개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모두와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부탄은 우리나라와 단독 수교국이고, 여타 6개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다. 1992년중에 우리나라에는 서남아지역에 495만불 상당의 무상원조를 공여하였고, 연수생 48명을 초청하였으며 전문가 2명을 파견하였다. 또한 1993년도 우리나라의 대서남아지역 총 교역량은 36.4억불(수출:29억불, 수입:7.4억불)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서남아지역은 역내인구 12억(세계인구의 1/5)으로 시장 잠재력이 크며, 자원확보, 투자진출(저임국, 외국인 투자자 각종혜택 부여)에 유리하고, 또한 이지역 국가들이 경제개방화 정책을 추진중이며 우리나라를 경제발전 모델로 간주, 호의적인 점등에 비추어 동 지역국가들과 실질협력관계 증대전망은 밝은 편이다.

### 라. 대양주 지역

#### 1) 지역정세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기타 다수의 소도서국 및 자치령으로 구성된 대양주 지역은 미국, 영국 등 전통적 우방국가와의 친선관계 유지와 남태평양 포럼(SPF) 및 남태평양 의원회(SPC) 등 다자간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속에 평화를 유지해 오고 있다.

냉전초기 미국, 호주, 뉴질랜드간 상호방위협정 체결로 결성된 ANZUS 체제는 남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추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1984년 7월 집권한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의 반핵정책으로 ANZUS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고, 미·호주 및 호주·뉴질랜드간의 양자 군사협력관계로 변형, 유지되고 있다.

지역협력기구로서 1971년 8월 발족한 남태평양포럼(SPF)은 제16차 회담(85.8월 Rarotonga 개최)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을 채택한 바 있고, 동포럼을 통해 역내 국가간 정치, 안보, 어업, 환경문제에 관한 공동보조 및 역외 선진국들로부터 원조확보와 그들의 국제적 지위격상을 위해 재반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남태평양 비핵지대화조약에 서명거부 입장을 견지하면서 핵실험을 계속하여 왔던 프랑스가 1992년 4월 이 지역에서의 핵실험중지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프랑스와 남태평양제국간 핵실험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독립문제, 역내 각국 지도층의 세대교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적 갈등 증대, 휘지 군사쿠데타의 여파, 파푸아뉴기니의 일부 분리주의자 소요사태와 같은 종족간 분규 대두 등으로 이지역의 전반적 안정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는 호주, 뉴질랜드 이외 남태평양 독립국가 10개국에 대하여 독립과 동시에 국가승인 조치를 취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93년 말 현재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4개 국가에 상주대사관(시드니에는 총영사관 별도 설치)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양주의 중심국가이며 아·태국가로서 그들의 위상을 격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와 전통적으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1993년도 교역량은 각각 45억불 및 7억불에 달하고 있다. 이들 양국가는 우리나라에 대한 안정적인 자원공급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통상·경제는 물론, 사회·문화면에서의 교류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가 APEC의 역할강화에 매우 적극적인 점을 감안하

여 우리는 APEC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 방안을 호주, 뉴질랜드와 적극 협의해 오고 있다.

한편,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남태평양 군소도서국과는 우리경제에 상응 한 경협자금 지원, 무상원조 공여,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등 개발협력을 통해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양주지역 13개국(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피지, 나우루, 마샬군도공화국,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바누아투, 서사모아, 솔로몬아일랜드,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1993년도 우리나라의 대 대양주지역 총교역량은 56.5억불(수출 : 13.5억불, 수입 : 43억불)로 교역량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2. 미주 지역

### 가. 미국

#### 1) 국내 정세

12년만에 집권한 민주당 행정부는 냉전종식에 따른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국내문제에 치중해야 한다는 국내적인 요구에 맞추어 출범하였다. 1993년 1월 20일 취임사에서 “미국의 재건”(American Renewal)을 강조 한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당이 숫적으로 우세한 의회의 지지를 기대하면서 변화의 가치 아래 국내정책 분야에서 많은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국내 경제의 회복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경제 활성화법안”(Economic Stimulus Package)의 의회 통과 실패, 동성연애자의 군복무 허용 논란 및 Baird 법무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실패등으로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향후 5년간 3,439억불의 연방

예산적자 삭감을 주내용으로 하는 “예산균형법안”(Budget Reconciliation Bill)이 8월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을 통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노력은 국방비 감축, 행정제도 개편으로 이어져, 미국은 1997년까지 1,000억불의 국방비 삭감과 47만명의 병력 축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3년도에 138개의 해외군사 기지를 폐쇄 또는 축소하여 효율적인 국방비 사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9월 7일에는 향후 5년간 연방정부 인력의 12% 이상인 약 25만명이 감축되고 1,080억불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행정개혁안도 발표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치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선거운동 자금을 줄이고 로비스트의 정치 현금으로 인한 폐해를 규제하는 선거자금법 개혁을 추진하였고, 운전 면허 등록시 유권자 등록을 가능케 하여 흑인, 저소득층의 선거참여 확대를 기했으며, 1월 20일에는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퇴임 후 유관 기관 로비를 5년간 금지시키는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윤리 서약”에 관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과중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무보험 또는 불충분한 의료혜택을 받는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증대시키는 의료제도 개혁도 추진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3월 충순부터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상의 카나다, 멕시코와의 환경 및 노동분야 보완 협상이 8월 13일에 완료됨에 따라 11월 17일 하원 표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의회에서의 민주당의 숫자 우세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저소득층의 고용 감소 우려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오히려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가 NAFTA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의원들에 대한 끈질긴 설득 결과, NAFTA 이행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 이러한 클린-

턴 행정부의 노력 배경에는 의회에서 NAFTA 이행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심각한 지도력 위기에 봉착하고, APEC 정상회의 및 UR 협상의 타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한편, 1993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수출 부진과 소비수요 감소 및 투자 지출 증가 둔화로 1.8%에 머물렀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국내경제 회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NAFTA 법안 통과와 함께 UR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출범 당시 7.2%에 달하던 실업률이 연말에는 6.4%로 낮아지는 등 경기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NAFTA 이행 법안의 통과,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등으로 임기 첫해를 대체로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국내 문제에 비해 국제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증가 일로에 있는 범죄 문제 및 세금인상 문제를 둘러싼 경제문제에서는 국민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부진과 함께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11월 2일 버지니아 및 뉴저지 주지사,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낙선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Whitewater 부동산 투자 의혹 사건과 여성관계 스캔дал에도 불구하고 1993년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의 지지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약 80%의 의회통과율을 기록하여, 클린턴은 최근 미국 정치사상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gridlock)을 해소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에는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재정적자 축소를 추진하면서, 뉴딜 정책이후 가장 광범위한 사회복지정책 시도로 평가되는 의료제도 개혁과 점차 정치·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예방 문제 등에 정책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는 정치개혁 법안의 의회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UR 협상 진행으로 미루어졌던 수퍼 301조

부활 법안, 무역협정준수법 등에 대한 심의도 의회의 주도로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 대외 정책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1993년은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하면서 대외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한해였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는 냉전 종식으로 미국의 가상적국이 불명확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세계적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약화되고,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국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내문제에 치중해야 한다는 상황 속에서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국내문제의 해결이 정책의 최우선이 될 것임을 천명해 왔고, 취임 이후에도 국제경쟁력 회복과 경제 재건을 위한 외교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2월 17일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교역의 증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조속한 체결 및 국방예산의 삭감만을 언급할 정도로 클린턴의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다.

국내문제 우선과 국제경제력 회복을 위한 외교 추구라는 대외 정책상의 변화 속에서도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외교정책 수행의 수단으로서 강력한 군사력의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미 역대 행정부의 전통적 대외정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적 안보 확보, 러시아의 개혁 지원, 유럽 및 NATO와의 관계 발전, 아·태 지역과의 협력강화, 중동 평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미국은 아·태 지역을 미국의 안보와 경제 번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아·태 지역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이는 7월 클린턴 대통령의 일본, 한국 방문과 11월

### APEC 경제지도자회의 개최 등으로 나타났다.

미·러 양국은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국제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미·러 협력 관계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4년 1월 3일에 2단계 전략무기감축 협정 (START) 협정이 서명되었고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시의 핵무기 완전 해체도 추진되었다. 또한, 미국은 10월 의회 해산 등 러시아 정국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엘친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럽의 경제·정치 통합을 지지하면서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추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의 NATO 가입 요구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우려를 반영,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Partnership for Peace)를 제안하였다.

점차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아·태 지역에 대해서는 1993년 7월 안보, 번영 및 민주주의에 기초한 “신태평양 공동체” (New Pacific Community)를 제창하고 11월에 APEC 정상 및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에서의 미군기지 철수 이후 ASEAN 국가들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회망함에 따라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등과의 양자 차원에서의 군사동맹 관계의 바탕위에 아·태 지역에서의 다자안보 대화도 모색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PKO 참여등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지지하고 있으며, 시장개방 및 무역불균형 문제는 양국간에 설치된 “포괄적 경제협의체”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과는 인권 문제, 중국의 핵실험 재개 등 양국간의 긴장 요인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경제적 협력 필요성, 세계 평화 및 동북아 지역 안정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을 고려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쉬 행정부 아래 계속되어온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

로 9월에 역사적인 이스라엘 - PLO간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이라크와 리비아에 대한 강경 자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8년간 끌어온 UR 협상의 타결을 위해 미국은 UR 협상상의 신속무역협상권을 1994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면서 쟁점이 되어온 농산물 협상분야의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93년 12월 15일 이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APEC 정상회의 개최, NAFTA의 타결과 함께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한 경제 외교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인권개선, 민주주의 신장, 환경문제 등 새로운 범세계적인 문제의 외교 현안화에 노력하면서, 유엔 등 다자 협력체제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세계적인 핵비확산 차원에서 1993년 6월 핵실험 유예를 연장하고, 더 나아가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1995년에 시한이 만료되는 NPT 조약의 영구화도 시도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외정책의 수행에 있어 러시아의 개혁 지원, UR 타결, APEC 정상회의 개최등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사태 등 지역분쟁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선거운동 당시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10월초에 소말리아 파병 미군의 피습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내적인 비판과 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클린턴 행정부가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대외환경에 적합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외정책을 수립,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대외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9월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레이크 안보보좌관, 클린턴 대통령 등의 일련의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미국의 세계적 역할 지속,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정책 수행의지 등을 표명함으로써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고 일관성 있는 대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1993년도를 돌아보면 미국이 새로운 국제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돌출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세계적 역할은 계속되었으며, 이점은 1994년도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에 있어 미 행정부로서는 대외정책에 관한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와의 협조관계를 증진하며, 국민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면서 국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나. 카나다

#### 1) 국내정세

1988년 11월 총선으로 집권 2기를 시작한 진보 보수당의 멀루니 수상은 지속적인 경제 불황, 2차례 결친 신헌법안의 부결 등 정치·경제적인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19%까지 하락함에 따라 1993년 2월 24일 수상직 사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진보 보수당은 6월 13일 전당대회를 통해 Kim Campbell 국방장관을 카나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상이자 오랜 퀘벡주 출신 수상이후 비퀘벡주 출신의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Campbell 정부는 기존 정부기구를 개편, 부처수를 32개에서 24개로 줄이고 내각내 외교국방정책위를 포함 6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몇 가지 분야에서 대내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Campbell 정부는 기본적으로 1993년 가을에 예정된 총선에 대비한 과도내각이었으며, 당내 결속을 최우선시하여 전임 멀루니 수상의 정책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2/1993 회계년도 (1993년 3월 종료) 연방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405억카불을 기록하고 실업율이 11%에 달하는 등 국내 경제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제1야당인 자유당이 집권

진보 보수당에 비해 20% 이상의 우세를 나타냈다.

10월 25일에 실시된 연방 총선 결과, 자유당이 총 295석 중 178석을 획득한 압승을 하였고, 집권 진보 보수당은 2석만을 획득한 대참패를 하였다. 또한, 퀘벡 연합이 54석을 획득하여 제1야당으로 등장하였고, 서부지역 기반의 개혁당도 52석을 획득하여 급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진보 보수당은 Jean Charest 부수상을 제외한 Campbell 수상 등 전 각료가 낙선하는 이변을 기록하였다.

자유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된 요인은 극심한 실업율 속에서 경제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유권자들에게 자유당의 제1 선거 공약인 고용 창출이 큰 호소력을 발휘했고, 의료보험등 사회복지정책 면에서도 타 정당에 비해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각료 경력 19년의 Jean Chretien 당수가 경륜의 정치가로서 경기 침체, 퀘벡주 분리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카나다를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자유당의 압도적 승리로 향후 카나다는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퀘벡 분리주의를 표방하는 퀘벡 연합 및 우익 성향이 강한 개혁당의 급부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최대 과제가 되어온 국가적 단합 문제 가 계속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대외정책

Mulroney 수상 및 Campbell 수상의 진보 보수당 정부는 미국, EC 및 일본과의 협력 강화 도모와 G-7 국가로서의 영향력 유지, 다자 협력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 아·태 지역국과의 관계 증진 도모를 카나다의 주요 외교 정책 기조로 삼아 왔다.

미국과는 기존 우호관계를 유지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클린턴 대통령 취임후 짧은 시간내에 3차례 (2월 5일 워싱턴, 4월 3일 뱅쿠버, 6월 2일

워싱턴)의 카·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1993년 7월 동경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을 통해 EC 및 일본과도 전반적 경제 협력 및 정책조화 방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카나다는 러시아 연방의 민주화 및 경제 개혁을 적극 지지하여 1993년 4월 벙쿠버 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2억불 상당의 대러시아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G-7 정상회담 등 기회있을 때마다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역설하여 왔다.

또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안보 협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여 UN 분담금 부담 확대를 통해 유엔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북태평양 안보 대화 및 CSCE, OAS, ASEAN-PMC 등 지역적 기구의 역할 확대에도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카나다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있어 이미 독보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바, 거의 모든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아·태 지역과의 관계에 있어 1993년은 카나다에게 매우 중요한 한해였다. 카나다는 APEC을 적극적으로 주창한 초기 멤버중의 하나로서 APEC이 보다 구체화,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이 카나다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카나다가 아·태 국가의 주요 구성원의 하나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다.

한편, 1993년 11월 4일 출범한 자유당 신정부의 Chrétien 수상은 대외 관계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보다 넓은 운신의 폭을 확보함과 동시에, 카나다 외교 정책의 범위를 더욱 확대, 향후 아·태 지역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NAFTA 협정의 재협상 의사를 천명하는 한편, 아·태 지역과 북미 대륙간 Pacific American Free Trade Arrangement를 모색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카나다는 한국을 자신들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중간급 강대국으로 인식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협조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아·태 지역의 신속한 경제 성장과 카나다 수출에서 아·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1991년의 경우 157억불로 대서구 수출 134억불을 초과)을 감안, 이 지역을 향후 자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중국에 이어 카나다의 제3의 수출 시장으로서 양국 경제관계는 어느 때 보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 11월까지의 양국 교역은 대카 수출이 12.6억불, 대카 수입이 15.5억불로서 우리측이 2.9억불의 적자를 보였다.

양국은 현재 차관보간 정책협의회 및 한·카 경제공동위를 양국 수도에서 연 1회 교대로 개최하고 있는데, 제7차 한·카 정책협의회를 1993년 6월 오타와에서 개최한 바 있다.

카나다는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대전박람회에의 참가를 가장 빨리 결정한 국가 중의 하나이며, 박람회 기간중 대규모 전시관을 운영하였고, Antonio Lamer 대법원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하는 등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많은 협조를 보여 주었다.

우리로서도 대카나다 우호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 바, 한때 카나다와의 마찰 소지가 있었던 북서대서양어업기구(NAFO) 수역내의 한국어선 조업 문제를 1993년 4월 동 선박의 전면 철수로 해결한 것이 그 좋은 실례가 되고 있다.

1993년 11월 시애틀 APEC 정상회의시 김영삼 대통령과 Chretien 수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역내 평화의 증진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상호 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협력이 어디까지나 개방주의를 바탕으로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특히 쌍무

관계에 있어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제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 기로 합의하였다.

카나다는 IAEA Core Group (9개국)의 일원으로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우리측과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특히 IAEA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다. 중미 지역

##### 1) 지역 정세

세계냉전체제의 종식후 국가간 상호 의존과 협력관계 증대 및 지역주의의 대두는 중미지역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이 지역은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OAS), 카리브지역 협력체(Caribbean Community or CARICOM)등 지역기구를 중심으로 역내 제국간의 결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티 사태, 쿠바정세 등 역내 정세 불안요인이 잔존하고는 있으나, 1980년대말 대다수의 중미국가들이 군부통치에서 문민정부로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1992년 12월 OAS 특별 외상회담에서는 반민주적 회원국에 대한 자격정지를 가능케 하는 OAS 헌장 개정을 추진하는 등 민주화 역행국에 대한 지역차원의 공동대응 노력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개별 국가별로는 이미 온두라스(1993.11.), 코스타리카(1994.2.)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데 이어 금년중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파나마, 멕시코에서도 선거를 통한 문민정부가 재창출될 예정이어서 중미지역의 민주화 진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내 민주화 확산 추세에도 불구, 최근 멕시코의 남부지역 농민 반란사태에서처럼 인종·종교적 갈등, 부의 왜곡된 편중, 난민·마약 및 빙곤문제 등 이지역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 불안요인은 민주화의 위

협요소로 상존하고 있는 바 향후 동 문제 해결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가 민주화 정착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적으로 중미국가들이 종전의 수입대체 산업전략을 대외개방, 국제화 전략으로 전환한 이후 인플레 진정, 민영화, 해외 자본유입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1993년 EU 출범, 1994년 NAFTA 발효등 세계 경제블럭화 추세에 대응하여 중미국가들은 중미공동시장(CACM), 카리브지역 협력체(CARICOM)등 지역경제 통합 노력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역내경제의 NAFTA와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0년 6월 27일 부쉬대통령이 무역 자유화, 투자증진 및 외채경감등 3개 부분의 「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를 발표한 이래, 1993년 11월 클린턴 대통령의 중미정상과의 회동, 1994년초 고어부통령의 미주지역 민주국 경제 정상회담 개최제의 등 일련의 미국이 주도하는 범미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중미지역이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동 지역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되어 왔다는 사실외에도 상품 수출 확대, 광물 등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투자, 기업 및 인력 진출 등을 위한 이지역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있다.

중미국가들은 한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음은 물론 APEC과 같은 아·태지역 협력체의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1994년중에도 기존의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자원외교, 경제협력 증진등 실질관계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청된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의 접경지대인 북부 Maquiladora 보세산업 지역에는, 삼성전자, 럭키금성, 대우전자 등이 칼라 TV 공장을 설립하였

고. 현대 정공은 컨테이너 생산공장을 설립하였는데 이러한 우리 기업의 대 멕시코 투자 진출은 멕시코의 저렴한 인건비와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와 관련하여 더욱 증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라. 남미지역

##### 1) 지역정세

얼마전까지만 해도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에게 정치적 불안정, 고율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연상시키는 실정의 연속지역이었다. 그러나 lost decade로 불리는 최악의 1980년대를 넘기면서 최근 들어서는 라틴 아메리카는 새로운 지도자들의 출현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찬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

우선 정치면에 있어, 1993년 5월 베네수엘라에서는 비자금 경호경비 유용문제로 Perez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이 지속되는 속에 치러진 1993년 12월 5일 총선(대통령, 상·하 양원)에서 Rafael Caldera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 1994년 2월 2일 취임 하였다. 콜롬비아에서는 Medellin 카르텔의 거두 Pablo Escobar가 1993년 12월 2일 사살됨으로써 Medellin 마약세력이 약화되고 또 하나의 마약조직인 Cali 카르텔 소탕에 주력하고 있으나 게릴라 및 마약단의 준동으로 야기된 불안한 사회 및 치안불안상태가 계속되는 등 몇몇 국가들의 민주적 문민정부를 향한 앞길에는 여러 장애요소가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가혹한 군부통치 하에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중남미 일반대중 사이에는 권위주의로의 복귀가 만성적인 경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전체적으로 보아서 민주체제가 뿌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페루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출마, 양원제 폐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

헌법이 공포(1993. 12. 29)되었으나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테러와 실업 구제 등의 부진으로 경제, 사회적 불안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1993년 12월 11일 실시된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연합의 Eduardo Frei 후보가 58%의 지지로 당선되어 1994년 3월 11일 취임 예정이다. Frei 후보의 승리는 현 Aylwin 정부 시정 실적에 대한 국민적 신임을 확인 한 것으로서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 대화와 consensus에 의한 정국 운용으로 착실한 민주발전의 추진이 예상된다.

경제면에서는 1980년대 쇠약의 위기를 넘기면서 남미 각국은 민영화, 개방화, 자율화를 핵심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성장 모델을 채택하고 거시적인 경제 구조의 조정 정책을 추구, 아르헨티나, 칠레 등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의 신호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탈산업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아르헨티나에서는 “알폰신” 전 대통령이 경제개혁 실정으로 퇴진하고 “메넴” 정권이 들어선 후 가히 놀라울 정도로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 1988, 1989년 각각 -2.6%, -4.5%를 기록하였던 경제성장률은 1990년 0.4%를 거쳐 1991년 5%, 1992년에는 무려 9%를 기록했으며, 1993년에는 안정화 정책으로 4.1%의 성장이 추정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을 가로막았던 인플레이션이 1989년 4천 9백%, 1990년의 1천 3백%에서 1991년 84%, 1992년 17.5%, 1993년에는 7.4%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경제회생은 굳이 아르헨티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990년까지만 해도 평균 1천 2백%에 달했던 중남미의 인플레이션은 1991년에는 평균 20%로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1992년에는 22%를 기록했다.

브라질(1788%)을 제외한 중남미 지역의 1993년도 평균 인플레이션은 15% 내외로 추정된다.

CEPAL(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은 1993년 중남미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 3.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1994년에는 3.5~4%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수출의 호조를 기반으로 1992년도의 침체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1993년도 성장율은 4.5%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제회생은 무엇보다도 각국 정부들이 방만했던 재정운영을 긴축재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 하나를 제거한데다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의 쇠퇴, 국민들의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고통분담 의식 제고등에 기인하였다고 할수 있다. 한편 보호무역주의 추세의 확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새로운 통상질서의 성립 및 환경, 인권, 마약등 새로운 잇슈의 등장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자 역내 국가간 경제통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데안공동시장(ANCOM : 남미 태평양 연안 5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은 1993년 2월부터 페루를 제외한 4개 역내국간 자유무역을 실시하였으며, 1995년 1월부터 공동시장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은 대외공동관세 설정, 역내 국가간 거시경제정책 조정등의 이견을 절충하여 1995년 1월부터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1990년 6월 부쉬 대통령의 미주자유무역권 즉 EAI(Enterprise for Americas Initiative) 구상을 근거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NAFTA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NAFTA의 조기확대를 추진한다면 미국과 중남미의 역사적 관계, 그리고 MERCOSUR, ANCOM을 비롯한 중남미 제국간 체결된 유기적인 통상, 무역 협정관계를 고려할때 NAFTA의 대중남미 확대가 급속히 추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NAFTA 회원국인 멕시코는 여기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간의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로 구성된

G-3(Group of Three)는 1994년 1월 1일부터 10년간 매년 10%씩 관세를 인하, 10년 후에는 자유무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칠레·멕시코 양국은 1995년 말까지 양국간 수입관세를 전면 철폐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칠레와 베네수엘라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994년 5월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할 예정이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카리브공동시장(CARICOM)과의 통상협정을 통해 대카리콤 수입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199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키로 하였다. 현재 칠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이 NAFTA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1차적 가입 대상국으로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가장 유력하며 미국과 중남미와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남미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남미 지역 여러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온 우방국들로서 우리나라의 굳건한 외교기반이었다. 특히 1991년 9월 제46차 UN 총회에서 남·북한 동시가입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는데 이 지역 국가들의 도움이 컼다고 할 수 있다. 1993년에는 남미 국가들이 대전 EXPO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 지역 국가들과 상호 이해와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한해였다.

1993년 6월 알베르도 후지모리 폐루 대통령이 방한(6.2-4), 김영삼 대통령과 한·페루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디에고 빠레데스 에콰도르 외무장관(9.2-4)과 오초아 안티춰 베네수엘라 외무장관(10.7-9)이 각각 방한하여 한승주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UN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조와 통상증진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편 산체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1993.8.6)과 와스모시 파라과이 대

통령 취임식(1993.8.15)에 이상옥 전 외무장관과 김덕룡 정무장관이 각각 특사로 참석하였다.

국제정세가 경제실리 외교의 추진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국가와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확대, 심화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아르헨티나 Mision주 경제사절단(4.10-13), 브라질 산파 까탈리나주 경제사절단(10.17-21)등 5개국의 6개 경제사절단이 1993년에 방한, 통상증진의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브라질 상공장관(9.29-10.3), 에쿠아돌 동력광산장관(7.17-21), 칠레 농업차관(11.30-12.1) 등 경제관계장·차관들의 방한으로 실질 경제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고로 중남미는 EU의 1/2과 맞먹는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최근(1986-1992년 기간중) 우리의 대중남미 수출은 547%의 높은 신장율을 시현하였으며 중남미 경제의 호전으로 이들 국가의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 3. 구주 지역

#### 가. 서구지역

##### 1) 구주통합의 진전

1993년은 구주공동체 (EC)가 1957년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해 왔던 구주통합 운동의 기념비적인 해였다.

1993년 1월 1일부로 구주단일시장 (single European market)이 공식

출범, EC 회원국간 노동·상품·자본·서비스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는 한편, EC 12개국과 EFTA 5개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페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간에 체결된 구주경제지역 (EEA) 설립협정이 12월 13일 비준됨으로써 1994년 1월 1일부로 인구 3억 8천만명, 세계 교역의 4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92년 2월 서명된 구주연합조약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2년에 걸친 각 회원국의 비준과정 끝에 1993년 10월 13일 독일이 마지막으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년 11월 1일부로 발효, 마침내 구주연합(European Union : EU)이 공식 출범한 것은 구주통합사는 물론 국제정치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구주연합조약의 발효에 앞서 EC는 1993년 10월 29일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담을 개최, 마스트리히트조약대로 1994년 1월 1일부로 구주통화기구 (EMI) 발족을 요지로 하는 경제통화동맹 (EMU) 2단계 돌입을 결의하고 구주통화기구 소재지(프랑크푸르트)와 총재(Lamfalussy 벨기에, 당시 국제 결제은행 총재)를 결정하는 한편, 공동 외교·안보정책 구현을 위해 우선 5개 협력분야를 확정하였다.

또한 구주연합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브뤼셀 구주연합 (EU) 정상회담 (93.12.10-11)에서는 구주 집행위가 제출한 “경제성장 및 고용백서”를 채택, 물가안정과 고용증대를 당면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공동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중·동구제국과 구주안정협약 (European Stability Pact)을 체결, 1994년 4월 제 1차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한편, 내무·사법분야 협력을 위해 1994년중 구주경찰청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이민, 비자, 대 테러, 마약 정책을 추진키 위한 세부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함으로써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설정한 1999년까지의 구주 정치·경제통합 목표 실현을 위해 1994년부터 본격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993년은 구주통합을 위한 일련의 구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주통합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향후 원만한 통합 작업 진행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한 해이기도 하였다.

구주연합 각국은 역내 투자·수요 부진과 통화 불안,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경제 침체 여파 등으로 18년만의 마이너스 성장 (-0.3%)과 전후 최악의 실업률(11%)을 기록하였으며, 1993년 9월 구주환율조정장치(ERM)의 붕괴를 막기 위해 ERM의 환율변동폭을 종전보다 대폭 확대 ( $\pm 2.25\% \rightarrow \pm 15\%$ )함으로써 구주 통화체제(EMS)의 난맥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제난과 실업, 구 동구권 국민의 유입에 따른 사회문제 및 각국내 부정·부패 척결문제 등으로 서구 각국은 보편적으로 집권당의 통치기반 약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극우 민족주의 및 좌파 세력이 대두하였다.

앞으로 구주통합 심화 과정상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구주단일 시장과 구주경제지역(EEA) 수립에 기반한 구주연합 회원국의 통합 의존도 심화, 통합과정 자체의 상승 논리, 통합 구주의 국제 정치·경제적 역할 및 중요성 증대 등에 힘입어 통합은 계속 추구될 것이며, 구주연합은 미국 등과 함께 냉전종식 이후 신국제질서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구주안보환경 변화와 구주 안보체제 개편

1993년은 안보분야에 있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에 따른 범 구주군사·안보 관리문제가 초점으로 부각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서구동맹(WEU), 구주안보협력회의(CSCE)등 구주안보관련 기구의 역할 조정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새로운 구주 안보상황에 따른 구주안보 기구의 재편성 움직임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 가) 서구동맹(WEU) 기능 강화

구주통합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구주의 안보상황이 변화되면서 WEU는 1993년 구주연합의 국방 및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획담당 조직을 보강하고 군비물자·수송 및 전략 수립면에서 NATO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1993년 1월 사무국과 상임이사회를 런던에서 브뤼셀로 이전하고, 4월에는 군사 기획단을 발족시켰으며, 11월 유로군단을 출범시켰는 바, 향후 구주 안보를 위한 독자적 역할 수행과 NATO내 유럽 안보축의 강화 취지로서도 WEU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나) NATO의 전략 및 기구 개편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 후 NATO도 새로운 안보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신체제를 모색하여 온 결과, 기존의 전략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한편, 새로이 다국적 군단을 조직, 주방어군, 신속대응군 및 증강군으로 재편하는 등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한편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 및 러시아의 정정 불안에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동구 국가들의 NATO 가입 추진에 대해 러시아가 당초 양해하는 입장에서 선회, 전면적인 반대의사를 표명 (93.9.30 미·영·불·독 수뇌에게 엘친 대통령 친서 송부)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 중·동구 국가의 NATO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다) 구주안보협력회의(CSCE) 발전 동향

CSCE는 전 구주지역 국가와 미국 및 카나다를 망라한 구주지역내 유일한 “협력의 틀”로서 새로운 구주질서 형성과정에 있어 NATO, EU, WEU, Council of Europe 등 여타 기구와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CSCE는 구소련 및 동구권 변화 이후, 1990년 11월 파리 정상회의를 계

기로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을 채택하고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협정(CFE-1)을 체결하였으며, CSCE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무국, 분쟁방지센터, 자유선거사무소 등 3개의 상설기구를 신설하여 CSCE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어 1992년 7월 헬싱키 정상회의에서는 헬싱키 문서(Helsinki Document '92)를 채택하고, 유럽 병력제한협정(CFE-1A Concluding Act)을 체결하여 29개국의 병력 보유 상한선을 규정하였으며, CSCE 평화유지 활동의 제도화 및 소수민족담당 고등 판무관제, 안보협력포럼, 경제포럼 등의 신설을 통하여 CSCE의 조직을 강화한 바 있다.

1992년 12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3차 이사회(외무장관회의)는 CSCE 사무총장제 도입, CSCE 조정·중재재판소 창설, 소수민족담당 고등판무관 임명 등 CSCE의 제도화 내지 상설기구화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였다.

1993년 11월 로마에서 개최된 제4차 이사회는 CSCE의 분쟁예방 및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사무국을 비엔나로 이전키로 하였으며, 정무협의를 위한 상설기구로 상설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등 상설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금후 CSCE 주요회의로는 1992년 9월 이래 계속되고 있는 비엔나 안보협력 포럼을 비롯, 제5차 검토회의 및 정상회의(1994년, 부다페스트), 제5차 이사회(1995년, 부다페스트) 등이 예정되어 있다.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와 EC를 중심으로 한 서구제국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는 1993년 우리의 문민정부 출범에 따라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우리 신정부 출범직후인 1993년 3월초 콜 수상이 독일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고, 9월에는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여, 이들 핵심 서구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스웨덴의 빌트 수상이 4월 방한하였고,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외무장관들도 잇따라 방한하여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서구국가 주요인사의 연이은 방한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제고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6월 한승주 외무장관이 유엔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각각 공식 방문하여 국제무대에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제반 국제문제에 대한 공조·협력관계를 다짐하였다.

한편, 구주공동체(EC) 국가들이 1993년 1월 1일부로 단일시장을 출범 시킨데 이어 11월 1일부로 구주연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구주연합(EU)과의 관계발전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 EC 집행위원회의 “대한국 보고서”에 따라 EC 각료이사회는 1993년 6월 “대한국 결의안”을 채택하여, 과거 경제·통상관계에 중점을 두어 온 한·EC 관계를 한 차원 높여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정치·사회적 동맹체로 발전해가고 있는 구주연합(EU)이며, 일에 못지않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외교의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구주연합(EU)과의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한·EU 기본협력협정” 체결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대EC 교역은 전반적인 EC내 경제여건의 약화와 함께 전자, 섬유, 신발 등 우리의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EC의 반덤핑 조치 등 각종 수입 규제 및 수입 제한조치로 인해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1991년 도부터 적자로 반전하였다. 정부는 EU의 단일시장 완성 및 확대에 대비, 현지 투자증대와 함께 첨단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 협력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자간의 정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대 EU 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 나.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 1) 국내정세

1993년은 러시아가 신헌법 채택과 신의회 구성을 통해 소연방 해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온 소비에트체제를 청산하고 민주화와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해라는 점에서 러시아 역사의 획을 긋는 해였다.

러시아의 구헌법은 브레즈네프 시대에 제정된 헌법이었다. 러시아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은 대통령이었으나 구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은 인민 대의원회의로 규정되어 있었다. 법과 현실사이의 이러한 모순은 소연방 해체 직후에는 대통령과 의회의 이해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됨에 따라 의회와 대통령간 갈등과 대결의 원천이 되어 왔다.

옐친 행정부의 급진개혁정책 추진을 둘러싼 의회와의 대립은 1992년 12월 제7차 인민대의원 회의에서 개혁정책의 입안자인 가이다르 총리서리의 인준이 부결됨으로써 더욱 심화되었으며, 1993년 2~3월에 들어서면서 대통령과 의회간의 상호 불신은 양측의 화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옐친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주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4월, 국민투표 실시의 모험을 감행한 바 러시아 국민은 옐친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였다.

옐친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확보한 신임을 바탕으로 의회와의 타협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의회내 보수파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행정부와 의회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이중적인 권력구조가 지속되자 이같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옐친 대통령은 1993년 9월 의회해산을 단행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어 12월 12일 실시된 국민투표와 총선에서 신헌법이 채택되고 새로운 의회의 상·하원 의원이 선출되었다.

1993년 12월 국민투표에서 채택된 신헌법은 구 소비에트체제의 청산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과거의 헌법에 비해 대통령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 국민투표 실시권 등을 갖게되어 권한이 종래보다 확대되었으나, 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2원화되어 권한이 분산되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도 훨씬 어렵게 규정되는 등 의회의 권한은 과거보다 훨씬 제한되었다. 또한 신헌법에서는 자치공화국에 대한 주권조항이 삭제되어 지방의 권한이 약화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체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된 총선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의 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제 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반면,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자유민주당이 급부상하고 보수성향의 공산당, 농민당도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총선결과는 정부의 개혁정책 실시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년간의 개혁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나타난 경제사정의 악화, 범죄 급증등 사회적 혼란상과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총선에서 개혁파가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였으나, 신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엘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혁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엘친 대통령은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불만을 수용하여 개혁의 폭과 속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내각에는 온건개혁 인사가 다수 기용되고 정책의 기조도 긴축정책에서 탈피하여 산업생산 증대와 서민보호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긴축정책으로 산업생산이 급격히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1993년중에 최악의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시점에서 신내각이 긴축정책의 기조를 완화할 경우 초인플레이션등 경제 불안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CIS 제국은 1993년도에 공동 무역지대 및 경제통합 증진을 위한 의정서, 신루블권 창설 협정 체결 등 경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구소련방 소속 국가였던 CIS 제국간에는 통합을 추구하는 구심력과 분리독립을 하려는 원심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CIS 국가들의 통합 움직임의 근본적인 동기는 CIS 제국의 자발적인 통합 의도라기 보다는 각국이 처해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경제협력관계 회복이 긴요하다는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난 2년간 CIS 국가간에 체결된 제 협정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고 있어 CIS 제국간의 경제협력 노력의 성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민족 분규의 다발로 인한 안보문제의 공동 해결, 경제난 극복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어 CIS 국가간의 공동체는 느슨하나마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CIS내 여타 국가들은 1993년 중에도 소연방 붕괴 이후 계속되어 온 보·혁세력간의 갈등,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주의적 경제구조 와해 등으로 계속 혼란을 겪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옛 공산세력과 민족주의 세력간의 갈등이 침예화되고 있으며 경제악화, 핵문제, 크리미아 분리독립 문제 등으로 정치·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루지아의 내전은 압하지아지역 분쟁을 둘러싸고 많은 인명의 희생을 내면서 계속되고 있어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간의 분쟁과 함께 코카서스지방의 불안한 정정 원인이 되고 있다. 타지키스탄과 몰도바도 민족분쟁과 권력투쟁이 얹혀 정정이 어지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상대적으로 정정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경제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경제개혁을 둘러싼 내부적 갈등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든 CIS 국가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2) 대외정책

러시아의 독립 이후 구 소련邦 구성 공화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러시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국가들이 소위 'near-abroad'로 지칭되는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을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소연방 해체로 인해 CIS제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보호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CIS 각국의 정정이 불안해지는 경우 러시아의 안보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러시아는 이들 국가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라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정치·경제 개혁 추진에 몰두할 수 있는 외적 여건 조성과 서방의 지원 확보를 위해 우호협력관계 유지가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서방의 지원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러시아는 서방의 원조 확보를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시장 진출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군사장비·우주장비 등의 대외 판매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세계 질서 재편과정에서 새로운 외교 방향을 수립하는 단계에 와 있고, 새로운 구주 안보 질서 건설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포함되는 집단 안보 체제 수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참여가 배제된 동구권 국가의 NATO 가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아·태 지역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 아·태 정책은 이 지역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중국과의 선린 관계 유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유지 및 아·태 협력 과정에의 적극 참여 등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아·태 정책은 동서균형 외교를 통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대한반도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는 경제협력 대상으로서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중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접촉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통일과정이 주변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다. 중·동구

##### 1) 지역정세

중·동구국가는 1993년중에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정책을 추구해 왔으나 체제전환 과정에서 인플레 만연, 생산성 저하, 실업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적 불만 증대를 이용한 구공산계의 세력확장이 눈에 띄는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좌파세력이 재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수 있으나 공산당의 대체세력으로 등장했던 이른바 민주정권의 무능력과 분열, 지지부진한 경제개혁, 국민들의 과거 회귀심리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의 경우 총선(93.9.) 결과, 구공산계열의 민주좌파연합 및 농민당이 제1, 2당으로 부상하여 좌파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헝가리의 경우 집권여당인 헝가리 민주포럼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하락되고, 구공산계 사회당에 대한 지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의 경우에도 구공산계열의 사회당에 대한 지지가 현 집권당의 지지율(9%)을 상회, 그 지지율이 21%에 이르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등 기타 국가도 구 공산당을 승계한 세력이 개혁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냉전체제하에서 다양한 민족을 강제로 결합시켰던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사라짐으로써 폭발한 중·동구지역의 민족주의 욕구는 1993년에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정세의 주요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고사태는 차치하고라도 루마니아내 헝가리계 소수민족 문제, 불가리아내 터키계 소수민족 문제, 루마니아-몰도바 통합문제, 신유고연방내 코소보 독립문제, 슬로바키아내 헝가리 소수민족 문제등을 둘러싼 지역국가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중·동구국가들은 완전한 서구권으로의 편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헝가리와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93.1.), 불가리아(93.3.), 체코 및 슬로바키아(93.3.)도 EC와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EC와 통합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전개해 왔다.

특히 안보측면에서 불안해 하고 있는 중·동구 국가들은 옐친대통령의 중·동구순방(93.8.24-26)시 NATO 가입 불반대 입장 표명을 계기로 NATO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리시아가 종래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가입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가입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Peace) 계획을 수립하여 중·동구지역 국가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밖에 Visegrad국가(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정상들의 역내 자유무역지대 창설합의(91.1.)에 따라 체결된 중구자유무역협정(CEFTA)이 발효(93.3.1)되어 소지역 차원의 지역협력 토대가 마련되었다.

## 2) 유고사태

UN 및 EC는 유고사태 해결을 위해 제네바회담(92.12.-93.1.) 및 뉴욕 회담(93.1.-3.)을 통해 민족별 자치주로 구성되는 연방제 국가형태의

Vance-Owen 안을 제시하였으나 세르비아계의 거부로 합의에 실패하였다.

신유고연방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사태는 군사적으로 우세한 세르비아계의 일방적인 승리속에서 내전 당사자간 전투가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보스니아사태 분쟁 당사자들은 제네바에서 평화협상을 재개(93.8.)하여 세르비아계의 무력점령에 의한 그동안의 영토확장을 사실상 묵인하면서 Owen-Stoltenberg 평화안 (민족별 영토분할 : 세르비아계 52%, 회교계 31%, 크로아티아계 17%)을 현실적 타협안으로 삼아 절충을 시도하고 있으나, 회교계의 추가적인 영토 요구와 아드리아해 접근회랑 및 항구의 할양 요구로 평화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중.동구국가들은 짧은 수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엔가입 지원을 비롯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등 친한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투자진출 및 기술협력 제공 등을 적극 요청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꾸준히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이 1993년 1월 1일자로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됨에 따라 동 일자로 체코 및 슬로바키아를 승인하고 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체코연방 분리후, 1993년 6월 Zieleniec 체코 외무장관 및 8월 Moravcik 슬로바키아 외무장관 등이 방한하여 우리와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구주순방의 일환으로 6월 폴란드를 방문하여 양자간 교류확대, 실질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에서의 상호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대전 EXPO 기간중에는 Goncz 헝가리 대통령이 비공식 방한 ('93.11.3-6)하는 등 많은 중·동구 고위인사들이 방한하여 양자 차원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금년중 대중·동구 교역량은 대략 7억불 정도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규모를 고려 할때 아직 미미한 규모이다. 대 중·동구국가와의 교역량이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중·동구국가들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정 및 경제난, 유고사태와 같은 지역 분쟁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중·동구국가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이를 국가와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중동·아프리카지역

##### 가. 중동지역

###### 1) 지역정세

구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제2차 대전후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지속되어 왔던 미·소간의 경쟁이 종식되고, 걸프전쟁이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승리로 종결됨에 따라, 중동지역내 힘의 균형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걸프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다국적군을 결성하여 사우디를 비롯, 걸프주변국 왕정을 수호하고 쿠웨이트 왕정을 회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걸프·아랍국가들과 미국의 관계는 한층 더 긴밀해졌으며, 이를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한편, 중동지역 국가들간에 이라크와 같은 역내 군사대국의 등장을 막아

야 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집트, 시리아, 이란, 사우디 등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의 세력균형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는 패전으로 인한 피해와 국제적 제재로 경제·군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동정치 전면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걸프전을 위요한 아랍 각국간의 갈등 노출은 아랍권의 내분을 더욱 심화 시켜, 향후 범아랍주의 보다는 각국의 이해를 우선하는 국가별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 등의 지원을 받는 회교원리주의의 세력 확대와 아랍왕정 국가내에서의 점증하는 민주화 욕구등은 계속하여 동 지역 내에서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걸프안보체제

걸프전 이후 역내 안보체제 구축과 관련, 걸프협력위원회 (Gulf Cooperation Council : GCC) 6개국과 이집트, 시리아를 포함한 “6+2” 방식은 사우디등의 일방적인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 역내 군사력에 국한되는 방위체제에 대한 불신등으로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며 GCC 정상 회담에서도 회원국간 공동방위 노력 증진과 방위협력을 모색한다는 원칙 친명 이상의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 이란이 주장하는 “6+1” 방식도 이란에 대한 역내 국가의 경계심으로 실현을 기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같이 GCC 회원국들이 집단안보체제 원칙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것은 회원국간 이해관계와 역내 집단안보체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 국가들은 결국 당분간 쿠웨이트의 경우와 같이 미·영·불등과의 개별적 방위협력체제를 역내 안보의 근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 3) 중동평화

구소련의 붕괴 및 걸프전이후 미국 주도의 중동질서 재편에 따른 미국과 소련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1991년 10월 마드리드에서 중동평화 국제회의가 개최 된 이래 이스라엘과 아랍측 당사자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간에 중동평화 양자회의가 워싱턴에서 개별협상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1992년 1월 모스크바 전체회의 개최이래 환경, 지역안보, 군축, 경제개발, 수자원, 난민문제에 관한 5개 분야별 중동평화 다자회의도 개최되고 있다.

1993년 9월까지 11차에 걸쳐 중동평화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팔레스타인 자치문제, 골란고원 반환 및 평화보장 문제등 중동평화의 핵심사항에 대한 양자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회담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이스라엘과 PLO는 오슬로에서 8개월에 걸친 10여차례의 비밀회담을 통해 1993년 9월 13일 이스라엘 점령지인 가자지구 및 예리코시에서의 팔레스타인 자치 부여에 합의함으로써 중동 평화의 역사적 진전을 이루하였다. 이어 라빈 이스라엘 수상과 아라파트 PLO 의장은 1993년 10월 6일 카이로에서 자치협정 이행 협의를 위한 4개 위원회 구성에 합의, 본격적인 자치 준비에 들어 갔으며, 이스라엘군 철수를 위시한 행정권 이양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중이다. 한편, 1993년 9월 14일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동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구도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중동지역은 세계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중요성 및 1980년대 후반 세계의 중동지역 원유에 대한 의존도 증대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이들 국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어 대중동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할 것이

다.

또한 우리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르는 선진국과의 대외 통상마찰등 제반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은 우리에게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통한 상당한 가능성과 성취의 잠재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걸프사태이후 중동정세는 상당기간 유동적이고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 대중동 외교도 그러한 정세 추이를 예의 관찰 주시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우리 나라와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는 이집트와 시리아 뿐으로 이집트와는 1961년 영사관계를 수립한 이래 30여년이 되었으며 시리아와는 아직 아무런 공식관계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이들 양국과의 수교가 지연된 것은 이들 국가와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가 그 주요원인으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이들 국가와의 수교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1991년 5월 무바락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대표로는 최초로 강영훈 특사를 접견하고 주한 이집트 총영사관을 개설키로 통보함에 따라 1991년 8월 초대 주한 이집트총영사가 부임하여 주한 총영사관이 개설되었고 최근에는 양국간 실질 경제협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리아와의 관계 개선은 아직까지 구체적 진전이 없는 가운데 시리아측이 우리나라의 경협증진을 희망하고 있으나 시리아의 대북한 군사 의존도에 비추어 가까운 시일내에 시리아의 입장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살펴보면, 중동지역은 우리의 주요 원유도입선이자 주요 건설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이들로부터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확보하고 이 지역에 대한 건설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우리 통일원 장관의 예멘방문, 노동부 장관의 이란 방문, 외무부 차관의 사우디 및 이집트 방문에 이어 1993년도에도 정부 특사파견, 이란 외무장관 방한, 사우디 상무장관 방한등

고위인사 교류를 통하여 양자관계가 보다 강화되었다.

한편, 걸프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제분쟁이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무력침략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능력상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걸프 주변 피해국에 1억 1천 5백만불과 미국 등 다국적군에 3억 8천 5백만불을 지원하는 등 총 5억불의 재정지원을 공여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걸프전쟁 기간중 군 의료지원단 및 수송단을 파견하였다.

우리는 걸프전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국제적 분쟁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유엔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로서의 도의적 의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고 걸프연안 제국들로부터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원으로 걸프전후 안정된 원유공급 확보 및 전후 복구사업 참여등 우리 나라의 대중동 진출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 나. 마그레브 지역

### 1) 지역정세

아랍권중에서도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마그레브지역은 리비아의 원유 (매장량 255억배럴, 세계 8위), 알제리의 천연가스 (매장량 3조7천억입방 미터, 세계 4위)와 원유 (매장량 92억배럴), 모로코의 인광석 (매장량 106억톤, 세계 1위), 모리타니 연안의 세계적인 어장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 (총 7,843천km<sup>2</sup>, 한반도의 35배)과 많은 인구 (총 8,500만명 추산)로 경제적 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는 유럽, 중근동, 아프리카와 대서양 사이에 있어 국제정치·지정학적 중요성도 매우 큰 지역이다. 마그레브지역은 그간 서부 사하라 문제 등으로 지역정세

가 다소 불안정한 편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모로코, 알제리간 화해와 더불어 마그레브 아랍연합 결성등의 결과로 차츰 지역분쟁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알제리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확산은 동 지역의 정세불안 요인으로 계속 남아 있다.

마그레브지역 불안의 주요요인이 되어 온 서부 사하라 문제는 모로코·알제리간의 국교 정상화로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유엔 사무총장은 1988년 8월 모로코와 폴리사리오에 “휴전후 유엔 감시하의 주민투표실시”라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양측으로부터 원칙적 동의를 받아낸 후 UN 주민투표실시단 (MINURSO)을 설치하고, 1993년내 서부사하라 귀속문제를 결정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투표 참가자의 범위를 위요한 양 당사자의 의견 대립으로 투표는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리비아는 1969년 카다피 지도자 집권이후, 반미·반제국주의 이념을 표방,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심한 마찰을 빚어왔으며, 양국관계는 계속 냉각된 상태이다. 미국은 리비아가 테러집단 지원을 포기하지 않고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혐의로 종전의 대리비아 고립화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또한 리비아인 2명을 1988년 12월 록키비 상공에서 발생한 팬암기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기소하였으며, 동 용의자를 미국 또는 영국으로 인도받기 위해 민항기 취항 금지, 무기금수, 해외 리비아대사관 규모 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리비아 제재에 관한 UN 안보리 결의를 1992년 3월 31일 채택하였다. 그러나 리비아 정부가 동 결의 및 4차례에 걸친 제재 연장 결의에도 불구하고, 혐의자 인도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1993년 11월 11일 UN 안보리는 리비아의 해외자산 동결, 원유 생산·수송관련 장비 및 정유관련 장비 금수, 리비아 항공사의 해외지점 폐쇄 및 영업활동 금지, 항공관련 일체의 용역제공 금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비아 추가제재 결의(883호)를 채택하였으며 동 결의는 1993년 12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알제리는 1988년 10월의 시민폭동을 계기로 1989년 2월 신헌법을 채택하

여 다당제 도입등 민주화와 개방으로 급선회하였으나, 전국 14,000여개의 회교사원을 기반으로 한 이슬람 구국전선(FIS)이 199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 정권 장악이 거의 확실시 되자 알제리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장악했다.

민주절차에 의한 정권장악 성공직전에 군부에 의해 억압을 당한 FIS는 “이슬람 무장운동(MIA)”을 결성하고, 조직적인 테러행위를 격화함에 따라 군부는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FIS 과격분자 겸거를 강화하는 한편 공안 경찰력과 군대를 동원, 이슬람 무장세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알제리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FIS의 테러활동이 강화되고 있어 외국공관들도 자국민 철수 대책을 마련하는등 정정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튀니지는 1989년 4월 총선에서 벤 알리 대통령이 단독 입후보하여 당선되고, 집권당인 현정민주연합(RCD)도 전의석을 차지하였으며, 1990년 6월 거행 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거의 전 선거구를 RCD가 석권함으로써 벤 알리 대통령의 통치체제가 이슬람 운동권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외양상으로는 정착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벤 알리 대통령은 걸프사태로 이완된 민심을 수습하고 악화된 경제사정의 조기 회복을 위하여, 1991년 2월 20일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고 집권 RCD 당의 핵심기구인 정치국도 새로 개편하는등 걸프전 이후 새로운 국내외 정세에 대처 하며 자신의 통치체제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1984년 12월 12일 무혈 쿠데타이래 군부가 집권해 온 모리타니는 1992년 1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Taya 국가원수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며, 동년 3, 4월에는 상·하 양원 의원선거를 각각 실시하고, 양국 주민들간의 유혈충돌로 관계가 악화되었던 세네갈과의 국교를 정상화 하였다.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마그레브지역은 풍부한 에너지, 해양부존자원 및 방대한 건설시장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정부는 리비아 대수로공사에 대한 우리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비아 인사초청등 꾸준한 노력을 전개한 바 있다. 또한 1990년 2월에는 트리폴리에서 제2차 한·리비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985년 이래 현안이던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문화협정,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1단계 공사의 성공적인 성과에 힘입어 동아건설은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 계약을 정식 체결하였는 바, 수주액 48.5억불 (관련공사 포함시 총 56억불 예상)로 단일 공사로는 세계 최대공사이다.

이러한 한·리비아간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감안하여 정부는 1992년 4월 15일 UN 안보리의 제1차 대리비아 제재 조치 발효시 및 1993년 11월 11일의 추가제재 조치에도 신중히 대처함으로써 양국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 1월 국교를 수립한 바 있는 알제리는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 경제발전 경험의 전수, 상품 차관도입, 과학 기술 협력 강화 및 한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알제리와의 협력사업으로는 현재 총 5,400만불 상당의 알제리 호텔 건설 사업이 대우에 의해 1993년 8월 완공되었다. 알제리는 방대한 에너지자원(석유, 천연가스)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점을 감안, 삼성물산, 경인에너지등이 스페인 석유회사와 합작으로 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알제리 경제협력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알제리와 이중

과세방지협정, 비자면제협정, 문화협정등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모리타니와 모로코에는 그간 1천명 이상의 우리 선원이 진출하여 활동하는 등 이들 국가는 우리 수산업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으나 1987년 이후 동 지역에 대한 입어권 심사 강화로 우리 수산업계의 진출이 약화되고 있어 정부는 우리나라 선박의 입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 정부와 기존 수산협력 강화와 아울러 1993년 8월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 하는 등 양국간의 통상관계 증진 방안등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모리타니는 우리와의 교역관계가 미약하고 1987년이후 수산협력 관계가 악화 됨에 따라 정부는 외교망 정비, 재편 계획의 일환으로 1992년 12월 31일부로 주모리타니 대사관을 폐쇄하였으나 인근 공관장으로 하여금 모리타니 겹임 업무를 계속 수행케 하여 양국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동 지역에 의료단과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국위를 선양한 바, 동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여 우리나라와 마그레브 지역간 협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 다. 아프리카 지역

##### 1) 지역정세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는 1960년대초 독립이래 군사정권 혹은 일인 독재체제를 유지, 군사 쿠데타등 정변에 따른 정세불안을 거듭하여 왔다.

1980년대 후반 구소련 붕괴에 따른 냉전체제의 종식, 동구개혁등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과 함께 역내 국민들의 개혁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아프리카내에서도 민주화 개혁 움직임이 태동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이러한 민주화, 개혁 움직임

이 본격화되었으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미·소 양진영의 대아프리카 경제 원조 감소, 장기간 누적되어 온 지도층의 부패, 국가 주도형 계획경제, 무리한 외자 도입등 경제운용 미숙과 농산물등 1차산품 국제가격 폭락등은 요인이 민주화 개혁이 수반하는 각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되었다.

특히 서방제국의 대아프리카 원조 및 투자의 상대적 축소와 민주화 개혁 추이에 상응한 경협지원 정책표명으로 아프리카 문제의 아프리카인에 의한 해결이라는 자체 해결책 모색의 움직임도 대두되었다. 1991년중에 베냉, 카메룬, 쟁토메프린시페, 잠비아가, 1992년 8월에는 콩고가, 1993년에는 레소토, 마다가스칼, 니제르 및 중앙아프리카등 국가에서도 다당제하의 선거가 실시되어 민주 정부가 탄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정치·사회개혁 추진에 따라 독재체제하에서 억제되어 왔던 종족간, 지역간 반목 및 구집권세력과 개혁세력간의 대립이 유혈충돌로 발전, 새로운 과도기적인 정세불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자이르, 토고등에서는 기존 집권세력의 표면적인 민주화 약속 이행등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민주화의지 결여로 개혁과정의 충돌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 민주화 개혁과 경제발전을 향한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일부제국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등 부분적인 안정화 발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프리카 특유의 부족 중심주의, 식민제국의 자의적인 국경선 획정에 따른 국경분쟁, 일인 장기집권에 따른 부패 만연 및 경제상황등에 따른 제반 갈등 계속등으로 분쟁의 재연 및 확산 가능성이 잠재, 이에 따른 정세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정치·경제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그간 인종차별정책(아파타이트)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지탄속에 고립

을 면치 못하여 왔으나, 1989년 9월 「드 클레르크」 대통령 정부 출범이후 실시된 인종 차별 철폐조치와 26개 제 정파가 참여한 정치협상에서 합의한 남아공 최초의 자유총선 계획(1994년 4월 27일 예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고 있다.

투쟁과 반목으로 지속되었던 남아공내의 흑백분쟁은 흑백참석 총선을 계기로 흑인대통령과 각료를 포함한 새정부의 출현이 기대된다.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1973년의 「6.23선언」이래 이념과 정치적 제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모든 국가와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여 왔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특히 1980년대 후반에 그 결실이 서서히 나타나. 1987년 9월 소말리아, 1988년 8월 쌍토메프린시페, 10월 카베르데, 1990년 3월 나미비아, 6월 콩고, 9월 말리 및 잠비아, 10월 베냉, 1991년 1월 토고, 10월 부룬디, 1992년 1월 앙골라, 4월 탄자니아, 12월 남아공을 비롯 1993년도에도 3월 마다가스카르, 5월 에리트리아, 8월 모잠비크와 각각 수교하여 외교망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1992년 베냉 대통령을 비롯 부룬디, 가봉, 남아공, 앙골라, 잠비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외무장관 및 1993년 콩고 외무장관 방한과 홍순영 외무차관의 아프리카 3국 (코트디브와르, 케냐, 남아공) 순방, 대통령 특사 및 경제협력 사절단의 이 지역파견등 인사 교류가 빈번해져, 아프리카제국과의 우호 친선 협력관계 강화는 물론, UN과 비동맹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지기반을 착실히 넓혀 나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남남협력 정신에 의거하여 개발도상국과 실질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아프리카 무상원조 및 기술공여사업을 계속 강화시켜

왔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나이지리아에 2,500만불, 가나에 1,300만불, 우간다에 750만불의 차관을 공여하는등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비정치·경제분야에서의 다각적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동 지역에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을 파견하여 아프리카 의료 발전 및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고양에 힘써 왔다.

또한 우리는 남아공의 국내 민주화 진전에 따라 선진국가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대남아공 제재를 점차 완화하여 왔으며, 1991년 4월 인적교류 완화 조치 및 1992년 1월 일부 경제제재 해제 조치, 1993년 12월 석유관련 금수조치를 해제한 바 있으며, 1992년 12월에 남아공과 수교를 단행, 양국 간 협력증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993년 3월 주남아공 상주 대사관을 개설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외교의 성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부상하여 여타 아프리카지역 미수교국과의 수교도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미수교상태로 남아있는 일부 국가들은 친북한 일변도의 사회주의 노선 국가들로서 국제사회의 변화 추세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와의 수교 원칙에는 이견이 없으나 선경협 후수교의 절차를 밟아 자국민에게 가시적인 수교명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경험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수교원칙하에 이를 미수교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또한 이지역 국가들과 수교가 실현되는 경우 무상원조, 경험 기금, 수출입은행자금등을 통한 경제협력은 물론 민간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 하여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남남협력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남북한간의 소모적 대결외교로 인해 과잉확대된 외교망을 새로운 환경과 외교목표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여 우리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한정된 정부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1989년-1990년에 걸쳐 아프리카 지역에서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중앙아 및 르완다 등 4개 공관을 폐쇄하였고 우리의 유엔가입을 계기로 교민수, 교역규모, 외국의 상주공관 수, 주한 상주공관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92년초 모리셔스, 말라위, 시에라리온 등 3개 공관을 폐쇄하고 내전에 따라 임시 철수한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등 2개 공관을 공식 폐쇄하였으며 험지 공관 정리 차원에서 1992년 12월 모리타니 및 1993년 9월 스와질랜드 공관을 각각 폐쇄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통일, UN, 4강 외교의 기초역량으로서 대아프리카 외교의 중요성을 감안, 국력에 상응한 경협재원의 확충 및 민·관주도 통상확대 등을 통하여 기존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1990년대이후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 구도내에서 아프리카제국의 위상하락에도 불구하고 UN등 다자외교활동의 주요대상으로서의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1차산품 주요공급원, 상품시장 및 경제 진출대상으로서의 아프리카대륙의 비중을 인식, 1960년대이후 남·북 대치 상황 하에서 주요 외교활동 무대였던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외교적 투자를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추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화 이행을 추구하고 있는 아프리카제국을 지원함으로써 동 지역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1991년 우리의 UN가입이후 국제적인 위치에 상응한 책임과 역할수행의 일환으로 대외 원조·경협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 자체의 민주화 개혁 추진을 고무함으로써 비정치 경제분야의 실질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